

현대차, 5000만원 역대급 임금 인상… 업계 후폭풍 우려

완성차업계 최초 임금협상 마무리
현대차 6년 연속 무파업 교섭에도
핵심부품업체 노조 총파업에 몸살
기아노조 영업익 30% 성과급 요구
한국지엠·르노 등도 신경전 예상



+1800만원, 주식 25주 지급 등을 담았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협상에 따라 직원 개인당 평균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인상 효과를 얻게 됐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 폭이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기술직 총 800명 추가 채용(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00명 채용), 특별사회공헌기금 15억 원 조성,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를 기준 1년에서 총 2년으로 확장 등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다.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노사는 15일 올해 임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막힌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는 핵심 부품계열사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교섭을 마무리 했음에도 생산 가동을 멈추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게 불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지만 핵심 부품업체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자회사 모트라스는 지난 10일 오전·오후 조각 각각 4시간씩 총 8시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생산라인도 멈춰섰다. 모트라스는 쿠퍼(운전석)·섀시(차대) 등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다.

현대모비스 자회사지만 완성차인 현대차·기아에 핵심 모듈을 직접 공급한다. 부품 재고를 줄이기 위해 완성차 수요에 모듈 생산을 연동해 실시간으로

공급한다. 따라서 모트라스의 생산라인이 멈춰서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기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현대차 노사가 역대 최대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기아 노조도 눈높이가 높아졌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가 임단협을 앞두고 내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인원의 과반 이상이 4000만원 이상을 성과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아 노조측은 지난해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11.63%로 현대차(9.3%)보다 높았던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중견 완성차업계인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도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부활을 알린 한국지엠은 지난 8일부터 노조의 부분파업이 시작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1일까지 인천 부평

공장에서 17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에 지난해 회사의 순이익(연결기준 1조4996억원)의 15%(약 2249억원)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통상임금 기준 300%의 상여금을 달라는 요구안도 제시했다. 반면 회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액은 7만9000원으로 노조와 간극이 큰 상황이다.

올해 4년 만의 신차를 출시하며 내수 반등을 노리고 있는 르노코리아는 지난 11일 노사 본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실적 악화로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KG모빌리티도 3일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노조가 3년 정년연장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AMR' 글로벌 안전표준 인증

〈산업용 자율주행로봇〉

자체 개발한 저상형 AMR
'ISO 3691-4' 인증 획득



제정한 국제 안전 표준으로, 산업용 자율주행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이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선 위험을 줄이는 이중화 제어 기능 및 기구적 안전 설계에 대한 검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월 유럽에서 '자율주행로봇이 준수해야 하는 기계류 지침 법규(Machinery Directive)'를 충족하는 주요 표준으로 승인돼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안전 인

증으로 공표되기도 했다.

AMR은 미리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무인운반차(AGV, Automated Guided Vehicle)에서 한 발 더 진화해 스스로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 차세대 물류 로봇이다.

이 로봇에 적용된 안전제어기는 센서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감지해 로봇이 안전하게 감속 및 정지하도록 한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 이동로봇 구동안전제어기의 'ISO 13849-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제어기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검증을 활용해 기술을 고도화해 'ISO 3691-4' 인증을 획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정기섭 CSO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 사장
정기섭 전략기획총괄(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2일 진행된 제3회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 밸류데이에서 '기업가치 제고 전략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LG엔솔, AI로 배터리 설계기간 2주→1일로 단축

최적 셀 설계 AI 추천 모형 개발
고객 요구사항 입력후 바로 도출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셀 설계 기간을 '1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했다. AI 솔루션 도입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고성능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들이 원하는 성능 요건을 입력하면 최적 배터리 셀 설계안을 단 하루 만에 도출해내는 '최적 셀 설계 AI 추천 모형'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배터리 셀 설계는 고객사가 원하는 주요 성능 인자(용량, 에너지 밀도, 저항 등)를 만족하는 최적의 셀 조성을 도출해내는 업무다. 지금까지 관련 업무의 소요 시간은 약 2주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들이 원하는 성능 요건을 입력하면 최적 배터리 셀 설계안을 단 하루 만에 도출해내는 '최적 셀 설계 AI 추천 모형'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배터리 셀 설계는 고객사가 원하는 주요 성능 인자(용량, 에너지 밀도, 저항 등)를 만족하는 최적의 셀 조성을 도출해내는 업무다. 지금까지 관련 업무의 소요 시간은 약 2주였다.

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최적 설계안을 단번에 도출해낸다. AI가 만들어 낸 설계 값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포함해도 하루면 설계안을 확정 지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고객의 요구에 더 빠르게 최적의 설계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사내 셀 개발 시스템에 최적 셀 AI 추천 모형을 연동해 점차 배터리 셀 설계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시범 적용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배터리 셀 뿐만 아니라 배터리 모듈 및 팩 설계에도 해당 AI 기술 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고, 동시에 저수의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 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사업에서는 캐즘을 기회로 삼아 염호, 광산 등의 리튬 우량자원을 확보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비해 국내에서 제련·정제를 마친 니켈 제품을 생산하는 게 전략의 핵심이다. 향후 포스코그룹은 이차전지 소재사업 분야에 투자를 지속해 2026년 까지 리튬 9만6000톤, 니켈 4만8000톤, 양극재 39만5000톤, 음극재는 11만4000톤까지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양극재는 고객 다변화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한다. 음극재는 세계 유일의 'IRA 적격', '중국 등 외국 우려기업(FEOC)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기업으로서 천연·인조·실리콘계 음극재의 전체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세대전지 소재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고객사의 전고체 전지 상용화 계획과 발맞춰 전고체 전지 3대 핵심 구성 요소인 양극재, 고체전해질, 리튬메탈 음극재를 모두 공급한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성장 투자, 저수의 자산 조정 등 자본 효율성 개선과 함께 향후 3년간 교환사채 예탁 분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등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